

교통·환경·안전 도시문제, 인공지능으로 해결 ...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

- 13일부터 '26년 거점형·특화단지 공모사업 및 '27년 강소형 지원사업 안내
- 지방정부 6곳 이내 선정, 3년간 국비 최대 560억원 규모 지원

- 교통 혼잡, 기후위기, 안전 문제 등 도시 생활 속 불편을 인공지능과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.
 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교통, 환경,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인공지능·스마트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.
 -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'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, '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', '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, 해당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을 3월 13일부터 안내한다.
 - '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과 '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'의 경우 '26년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하고,
 - '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'27년 지원 기준*'을 안내한다.
- * '26년 강소형 지원사업의 경우, '25년 하반기에 기선정(전남 순천, 경북 안동, 충북 제천)

① '26년 거점형·특화단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

- '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,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 - 주거, 교통,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·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, 효과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를 연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.
 -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(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) 1개소를 선정하며,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원(국비:지방비 = 1:1 매칭)할 계획이다.
- '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'은 스마트도시 여건, 혁신기술 연구·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「스마트도시법」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,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.
 - 규제 완화,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,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·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·실증에 필요한 운영체제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,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.
 -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의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(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) 2개소를 선정하며,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(국비:지방비 = 1:1 매칭)할 계획이다.
- '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, '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'은 5월 11일(월)부터 13일(수)까지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,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(금)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*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* 국토교통부(www.molit.go.kr), 스마트시티 종합포털(www.smartcity.go.kr)

② '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

- '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, 지역소멸,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- '기후위기 대응형', '지역소멸 대응형', '모빌리티 특화형' 등 총 3개소 이내를 선정하며, 선정된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원 (국비:지방비 = 1:1 매칭)할 계획이다.

【 유형별 주요 내용(강소형)】

구분	기후위기 대응형	지역소멸 대응형	모빌리티 특화형
내용	친환경·탄소중립 기반, 기후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	인구구조 변화(저출산 등) 대응,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	미래 교통환경 변화 대응, 新 모빌리티 공간수요 반영, 지역교통 문제 해결 지원
대상	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(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)	인구 100만 명 이하 도시 (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)	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

- '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'은 3월 13일(금)부터 4월 30일(목)까지 사업 예산 신청(지방정부→국토교통부)을 진행하며,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3월 13일(금)에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,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.
- 올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계부터 성과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와 참여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,
 -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인 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관리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신뢰도 제고를 통해 공공·민간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사업 추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.
 -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8일 지방정부,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*도 개최할 예정이다.

* (일시/장소) 2026년 3월 18일(수) 14:00 / LH경기남부지역본부(오리사옥)

-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시정책관은 “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,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”면서,
- “특히,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역량을 갖춘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연희 (044-201-4845)
		담당자 <거점,강소형>	사무관	하하나 (044-201-4844)
			주무관	정채림 (044-201-4976)
		담당자 <특화단지>	사무관	이지형 (044-201-4097)
			주무관	정공주 (044-201-4973)

붙임

'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및 '27년 지원 계획

사업유형	'26년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	'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	'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
선정 지자체 수	1개소	2개소	3개소 이내
사업목적	스마트도시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으로 기업지원 기능과 스마트한 공간구조가 결합된 도시 조성	도시여건을 반영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환경 구축을 통해 민간 혁신기업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 조성	기후위기, 지역소멸, 첨단모빌리티 등 도시 환경변화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솔루션이 집약된 도시 조성
세부유형	단일 유형	단일 유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후위기 대응형 · 지역소멸 대응형 · 모빌리티 특화형
지원대상	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	특·광역시,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	인구 100만 이하*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 (*모빌리티 특화형은 제외)
추진체계	지방정부 주관, 기업 등 공동 참여	지방정부 주관, 기업 등 공동 참여	지방정부 주관, 기업 등 공동 참여
사업기간	3년 ('26~'28년)	3년 ('26~'28년)	3년 ('27~'29년)
국비 지원규모	최대 160억원	최대 80억원	최대 80억원
사업비	320억원 (국비+지방비)	160억원 (국비+지방비)	160억원 (국비+지방비)
신청방법	공모	공모	예산신청
신청서 접수기간	'26.5.11.(월) ~ 5.13.(수)	'26.5.11.(월) ~ 5.13.(수)	'26.3.13.(금) ~ 4.30.(목)

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조사업이며, 3개 사업유형에 중복 지원 불가